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29
----------	------

발의연월일 : 2021. 4. 6.

발 의 자 : 박 정 · 이상현 · 이병훈
허종식 · 이규민 · 고용진
유정주 · 오영환 · 이상직
어기구 · 임오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점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금지”를 “금지.”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1.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인 경우
2.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 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서 신설>

④ ~ ⑫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인 경우

2.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

-----.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 ⑫ (현행과 같음)